

# 최근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변화

## - 2014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

정 성 미\*

### I. 머리말

2014년에는 더디게 경기가 회복되는 가운데 노동시장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고용의 양적증가를 보여주었던 한 해였다. 늘어난 취업자 대부분은 상용직과 임시직으로 임금근로자가 전체 고용증가를 주도했다.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취업자가 대거 늘어나면서 2014년 8월 비정규직 규모는 6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규모는 증가하고 비중은 감소하는 경향이 추세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비정규직의 규모와 구성 변화를 각 연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활용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비정규직 내적구성 변화에 주목해 인적특성 변화를 살펴본 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를 다른 근로형태와 중복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따로 없는 순시간제와 구분해 특징을 분석하도록 한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추세적 변화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했는지를 금융위기 이전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smjung@kli.re.kr).

## II. 비정규직 규모와 구성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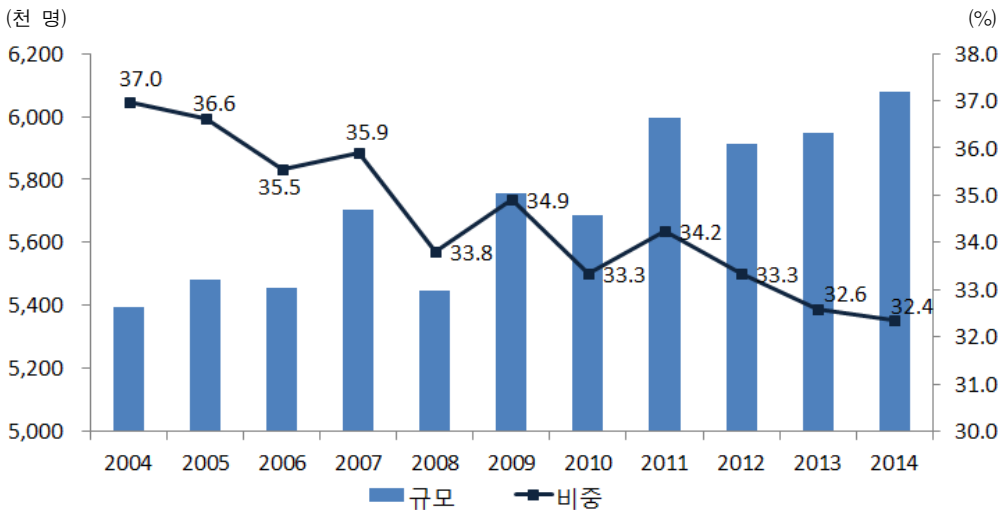
### 1. 비정규직 규모는 증가, 비중은 감소

2014년 8월 취업자는 25,88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94천 명이 증가했고, 이 가운데 임금근로자 증가분은 536천 명으로 취업자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3년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는 임금근로자 중심의 취업자 증가 영향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규모는 증가했다.

2014년 8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비정규직은 131천 명 증가해 6,077천 명을, 정규직은 404천 명 증가해 12,699천 명을 기록했다. 비정규직 증가규모가 예년에 비해 적지 않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임금근로자 증가폭이 워낙 컸던 영향으로 비정규직 비중이 소폭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비정규직 비중은 2012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32.4%를 기록해 2004년 이후 최저점을 기록했다(그림 1 참조).

세부 근로형태를 보면 한시적 근로의 경우 2014년 8월 임금근로자의 18.7%를 차지하며 추세적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고, 비전형 근로도 한시적 근로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11.2%의 수준에 그쳐 두 근로형태 모두 2004년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시간제

[그림 1]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 추이



주: 임금근로자 중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표 1〉 고용형태별 규모 추이

(단위: 천 명, %)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전 체	한시적 근로	비전형 근로	시간제근로
2004.8	14,584	9,190 (63.0)	5,394 (37.0)	3,597 (24.7)	1,948 (13.4)	1,072 ( 7.4)
2005.8	14,968	9,486 (63.4)	5,482 (36.6)	3,614 (24.2)	1,907 (12.7)	1,044 ( 7.0)
2006.8	15,351	9,894 (64.5)	5,457 (35.6)	3,626 (23.6)	1,933 (12.6)	1,135 ( 7.4)
2007.8	15,882	10,180 (64.1)	5,703 (35.9)	3,546 (22.3)	2,208 (13.9)	1,201 ( 7.6)
2008.8	16,103	10,658 (66.2)	5,445 (33.8)	3,288 (20.4)	2,137 (13.3)	1,229 ( 7.6)
2009.8	16,479	10,725 (65.1)	5,754 (34.9)	3,507 (21.3)	2,283 (13.9)	1,426 ( 8.7)
2010.8	17,048	11,362 (66.7)	5,685 (33.4)	3,281 (19.2)	2,289 (13.4)	1,620 ( 9.5)
2011.8	17,510	11,515 (65.8)	5,994 (34.2)	3,442 (19.7)	2,427 (13.9)	1,702 ( 9.7)
2012.8	17,734	11,823 (66.7)	5,911 (33.3)	3,403 (19.2)	2,286 (12.9)	1,826 (10.3)
2013.8	18,240	12,295 (67.4)	5,946 (32.6)	3,431 (18.8)	2,215 (12.1)	1,883 (10.3)
2014.8	18,776	12,699 (67.6)	6,077 (32.4)	3,508 (18.7)	2,112 (11.2)	2,032 (10.8)

주: 1) ( )안은 임금근로자 중 비중.

2) 한시적 근로이면서 비전형 근로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한시적 근로자에도 포함되고 비전형 근로자에도 포함되므로, 전체 비정규직 수는 한시적 근로+비전형 근로+시간제 근로의 합이 아님. 전체 비정규직 수는 이와 같은 중복을 제거한 값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 연도.

근로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 임금근로자의 7%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다 2009년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2014년 8월 200만 명이 넘는 수준까지 증가해 임금근로자의 1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간제 근로의 절대 규모는 2000년대 중반에 비해 두 배가량 증가해 비정규직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 19.9%에서 2014년 33.4%까지 증가해 비정규직 내 구성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시간제 근로가 비정규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른 시일 내 비전형 근로를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한시적 근로자를 세부 형태별로 나누어 보면 반복갱신은 규모와 비중 모두 2013년 대비 소폭 증가한 반면, 기간제와 기대불가는 규모와 비중 모두 감소했다. 기간제 근로는 여전히 한시적 근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 비정규직의 대표적 근로형태를 나타내고 있지만, 금융위기 이후 등락을 반복하며 감소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 일용직이나 호출근로와 매우 유사한 근로조건을 보이며 일자리 질이 좋지 않은 기대불가(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고용이 지속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는 일자리)의 경우 규모와 비중 모두 추세적 감소를 지속하며 2014년 405천 명을 기록하였고, 임금근로자의 2.2%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정규직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근접해 상대적으로 고용의 질이 좋다고 볼 수 있는 반복갱신(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반복하여 계약이 갱신되는 형태)은 규모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시기에 따라 증감 폭이 매우 크게 움직이는 것이 관찰된다. 반복갱신은 비정규직 내에서 임금과 근로조건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 근로형태가 변화하는 정도에 따라 비정규직 전체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크다. 2014년 8월 반복갱신의 규모는 353천 명으로 2013년 8월 대비 94천 명이 증가해 임금근로자의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형 근로를 세부 형태별로 보면, 모든 근로형태에서 규모와 비중이 모두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2 참조). 먼저 파견근로는 2014년 8월 임금근로자 중 1.0%를 차지하며 194천 명으로 나타났다. 파견근로의 규모가 20만 명 부근에서 소폭의 증감을 하기 때문에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 수준에서 소폭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편 용역근로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2008년 이후 60만 명 중반 수준으로 임금근로자의 3% 수준에서 약간의 변화를 했지만, 2012년 이후 감소를 지속하며 60만 명 초반대로 규모가 줄어들었다.

반면 특수고용은 규모와 비중 모두 추세적인 감소를 하고 있는 가운데 2014년 524천 명을 기록하며 임금근로자의 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한편 가내근로는 규모가 크지 않으며, 그 수가 감소하고 있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표 2〉 한시적 근로 및 비전형근로의 세부 형태별 고용규모 및 비중 추이

(단위 : 천 명, %)

	한시적 근로			비전형 근로				
	기간제	반복갱신	기대불가	파견	용역	특수고용	가내 근로	일일근로
2004. 8	2,491 (17.1)	580 (4.0)	526 (3.6)	117 (0.8)	413 (2.8)	711 (4.9)	171 (1.2)	666 (4.6)
2005. 8	2,728 (18.2)	302 (2.0)	585 (3.9)	118 (0.8)	431 (2.9)	633 (4.2)	141 (0.9)	718 (4.8)
2006. 8	2,722 (17.7)	465 (3.0)	439 (2.9)	131 (0.9)	498 (3.2)	617 (4.0)	175 (1.1)	667 (4.3)
2007. 8	2,531 (15.9)	555 (3.5)	460 (2.9)	174 (1.1)	593 (3.7)	635 (4.0)	125 (0.8)	845 (5.3)
2008. 8	2,365 (14.7)	374 (2.3)	549 (3.4)	139 (0.9)	641 (4.0)	595 (3.7)	65 (0.4)	818 (5.1)
2009. 8	2,815 (17.1)	170 (1.0)	521 (3.2)	165 (1.0)	622 (3.8)	637 (3.9)	99 (0.6)	883 (5.4)
2010. 8	2,494 (14.6)	305 (1.8)	481 (2.8)	211 (1.2)	608 (3.6)	590 (3.5)	70 (0.4)	870 (5.1)
2011. 8	2,668 (15.2)	339 (1.9)	436 (2.5)	197 (1.1)	672 (3.8)	614 (3.5)	75 (0.4)	962 (5.5)
2012. 8	2,714 (15.3)	289 (1.6)	400 (2.3)	214 (1.2)	682 (3.8)	545 (3.1)	69 (0.4)	871 (4.9)
2013. 8	2,761 (15.1)	259 (1.4)	412 (2.3)	204 (1.1)	646 (3.5)	545 (3.0)	73 (0.4)	821 (4.5)
2014. 8	2,749 (14.6)	353 (1.9)	405 (2.2)	194 (1.0)	604 (3.2)	524 (2.8)	58 (0.3)	805 (4.3)

주 : ( )안은 임금근로자 중 비중.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 연도.

도 0.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형근로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일일근로는 2011년 962천 명에서 2014년 805천 명으로 추세적인 감소를 지속하며 임금근로자의 4.3%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비정규직 중핵연령 감소, 청년과 고령자 중심의 증가

<표 3>의 각 성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 추이를 보면, 남성은 2004년 32.2%에서 추세적 감소를 하여 2014년 26.6%를 기록한 반면, 여성은 2004년 43.7%에서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40.8%로 감소했으나 위기 직후인 2009년 44.1%까지 증가하였고 이후 등락을 반복하며 2014년 39.9%를 기록해 여성 임금근로자 내 비정규직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이후 추세적 감소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각 성별 안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여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소폭 감소했지만, 비정규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절반 이상이어서 2014년 8월 5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 중 여성의 비중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급격히 상승해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53%대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이 관찰된다.

성별 비정규직 규모를 보면, 2014년 8월 기준 여성 비정규직은 3,251천 명, 남성 비정규직 2,826천 명으로 여성의 규모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남녀 비정규직 규모가 비슷했지만, 남성은 2007년에서 2014년 81천 명이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여성은 456천 명이나 증가한 영향이 반영된 것이다(표 4 참조). 이러한 변화를 성별·연령별로 나누어 보면 여성은 50세 이상, 특히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한 고령층 증가가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25~39세는 오히려 규모가 감소한 것이 관찰된다. 반면 남성은 25~49세는 비정규직 규모가 크게 감소해 남성 비정규직 규모 감소에 주된 영향을 미쳤으며,

<표 3> 각 성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 추이

(단위 : %)

	2004.8	2005.8	2006.8	2007.8	2008.8	2009.8	2010.8	2011.8	2012.8	2013.8	2014.8
전체	37.0	36.6	35.5	35.9	33.8	34.9	33.3	34.2	33.3	32.6	32.4
남성	32.2	31.5	30.4	31.5	28.8	28.2	27.1	27.8	27.2	26.5	26.6
여성	43.7	43.7	42.7	42.1	40.8	44.1	41.8	42.8	41.5	40.6	39.9
비정규직 중 여성의 비중	49.3	50.1	50.4	49.0	50.4	53.4	53.4	53.4	53.4	53.6	53.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 연도.

60세 이상의 고령층은 비정규직이 증가했음이 관찰된다. 남녀 모두 금융위기 이후 고령자를 중심으로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최근의 변화인 2013년 8월→2014년 8월 변화를 보면 남성(67천 명)과 여성(64천 명)이 비슷한 규모로 증가했고, 연령별로 보면 고령층과 청년층에서는 증가를, 중핵연령에서는 감소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남녀 모두 비슷한 규모로 증가했으며, 청년층은 남성은 20~29세, 여성은 20~24세를 중심으로 늘어난 공통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4〉 성·연령별 비정규직 규모 및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규모								증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3→2014	2007→2014
남성	전체	2,907	2,699	2,681	2,649	2,791	2,757	2,758	2,826	67	-81
	15~19세	72	64	61	60	69	85	72	70	-2	-2
	20~24세	183	175	199	193	199	200	229	246	16	62
	25~29세	361	332	306	277	289	246	240	265	25	-96
	30~34세	372	342	285	276	291	275	273	265	-8	-107
	35~39세	384	344	298	274	283	304	261	258	-3	-126
	40~44세	349	288	274	282	283	274	278	284	6	-65
	45~49세	309	306	305	277	298	281	273	261	-13	-48
	50~54세	266	257	263	291	304	298	287	290	3	24
	55~59세	241	223	235	262	270	270	307	297	-10	56
	60~64세	180	187	216	213	236	232	227	240	13	60
65세 이상	191	181	241	245	269	291	311	350	40	159	
여성	전체	2,796	2,746	3,073	3,036	3,203	3,154	3,187	3,251	64	456
	15~19세	86	72	85	88	91	110	102	112	9	26
	20~24세	282	289	281	282	294	290	301	327	26	44
	25~29세	318	306	315	317	302	280	261	253	-8	-65
	30~34세	266	221	238	247	270	239	249	238	-11	-28
	35~39세	361	358	360	313	319	289	279	285	5	-77
	40~44세	385	381	424	417	430	403	391	386	-5	1
	45~49세	354	358	405	377	406	399	377	362	-15	8
	50~54세	262	273	319	342	388	372	375	371	-4	109
	55~59세	192	192	224	226	250	277	323	324	1	133
	60~64세	131	129	164	167	170	181	201	207	6	76
65세 이상	158	168	255	260	283	314	328	387	59	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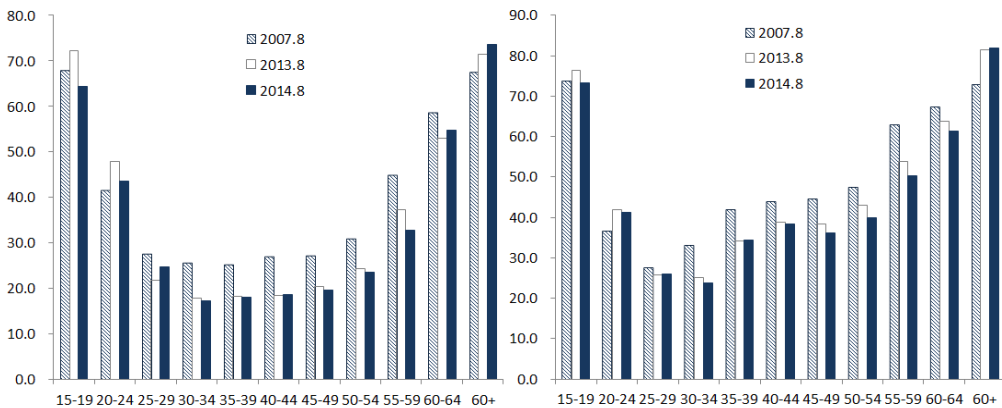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 연도.

비정규직 규모뿐 아니라 각 연령대의 임금근로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을 성별로 나누어 보아도 비슷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핵심연령층인 30~50대의 비정규직 비중은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해 최근까지 줄어들고 있으며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남성을 중심으로 한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크게 늘어났으며, 특히 2013년 → 2014년에는 남성 20대와 여성 20~24세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하면, 금융위기 이전과 2014년을 비교했을 때 비정규직 증가의 주된 이유로 여성화와 고령화가 포착되었다면, 최근의 변화(2013 → 2014)에서는 20대 청년층과 고령자 중심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동시에 과거와 최근의 변화 모두 남녀 중핵연령층에서 비정규직이 감소하는 양상은 지속되고 있다.

(그림 2) 연령별·성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의 연도별 변화(남성(좌), 여성(우))

(단위 : %)



주: 왼쪽이 남성, 오른쪽이 여성.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 연도.

### 3. 비공식고용에 가까운 순시간제

2007년 이후 시간제 근로(1)의 증가속도는 다른 근로형태와 달리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14년에는 200만 명을 넘는 규모를 기록하였고, 전체 비정규직의 1/3 이상을 차지하며 비정규직의 대표 근로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다. 2014년 8월 비정규직의 총 증가규모는 131천 명인데, 같은 기간 시간제는 149천 명 증가해 전체 비정규직 증가분 이상의 증가를 했다.

1) 통계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시간제 근로자는 “직장에서 정해진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 동일 종류 업무 수행 근로자의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주로 여성이 시간제 근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24세 이하의 청년층과 55세 이상의 고령층에 몰려 있으며 이 연령집단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퇴장한 이후의 연령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반면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해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는 25~49세 연령층의 눈에 띄는 변화는 포착하기 어렵다.

현재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근로형태를 기준으로 한시적 근로, 비전형 근로, 시간제 근로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속하면 비정규직이라 정의하고 있는 까닭에 비정규직이 중복되어 계산되고 있다. 따라서 시간제 근로이면서 한시적 근로나 비전형 근로인 경우들이 존재한다. 이에 한시적 근로나 비전형 근로와 중복되지 않으면서 언제까지라고 정한 기한이 없는 시간제 근로를 순시간제라 정의하고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살펴해보도록 한다.

<표 5>는 시간제 근로와 순시간제 근로, 순시간제 근로의 연령별 비중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순시간제 근로는 2014년 8월 기준 979천 명으로 시간제 근로의 절반에 가까운 48.2%를 차지하고 있다. 2004년 시간제 근로의 30% 수준에서 최근으로 올수록 지속적 증가경향을 보이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순시간제 역시 70% 이상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순시간제의 연령별 비중을 보면, 2014년 8월 기준 15~24세와 55세 이상 고령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두 연령집단의 순시간제 비중은 2004년 이후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표 5〉 시간제 근로와 순시간제 근로 추이

(단위 : 천 명, %)

	시간제	시간제 근로 중 여성의 비중	순시간제	순시간제 비중	연령별 비중			
					15~24	25~34	35~54	55+
2004	1,072	(74.0)	330	(30.8)	(26.1)	(23.2)	(38.8)	(11.9)
2005	1,044	(70.4)	369	(35.3)	(26.0)	(21.9)	(37.3)	(14.8)
2006	1,135	(69.6)	380	(33.5)	(24.0)	(24.8)	(37.2)	(14.1)
2007	1,201	(70.1)	467	(38.8)	(28.8)	(19.3)	(37.8)	(14.1)
2008	1,229	(69.7)	515	(41.9)	(28.3)	(17.9)	(36.2)	(17.6)
2009	1,426	(74.2)	558	(39.2)	(30.5)	(14.6)	(37.8)	(17.1)
2010	1,620	(73.7)	705	(43.5)	(29.5)	(16.7)	(36.4)	(17.4)
2011	1,702	(72.4)	727	(42.7)	(32.8)	(15.3)	(34.5)	(17.4)
2012	1,826	(72.3)	820	(44.9)	(31.6)	(14.2)	(33.8)	(20.4)
2013	1,883	(72.0)	858	(45.6)	(31.9)	(13.3)	(32.3)	(22.5)
2014	2,032	(71.1)	979	(48.2)	(29.9)	(14.1)	(32.2)	(23.8)

주 : 순시간제 비중은 시간제 근로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 연도.



〈표 6〉 순시간제 근로와 시간제 근로 일자리 선택 동기

(단위 : %)

	순시간제				시간제
	2009	2011	2013	2014	2014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에 만족	13.4	16.4	18.0	19.8	18.0
안정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1.7	1.6	3.0	2.4	1.7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26.8	26.9	27.6	23.2	33.2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	5.5	6.2	6.8	6.9	6.6
전공·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어서	1.5	1.4	1.6	1.6	1.4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동	4.3	2.6	2.4	2.8	2.8
육아·가사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	14.0	11.3	14.1	15.2	13.2
학업·학원수강·직업훈련 등을 병행	21.5	23.0	19.1	18.9	14.6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1.3	2.3	1.0	1.9	1.7
근무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절	8.0	7.5	5.6	6.7	6.2
기타	1.9	0.8	0.7	0.5	0.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 연도.

특히 15~24세는 노동시장 진입연령집단으로 이 집단의 순시간제는 대부분 아르바이트와 같은 형태로 도소매 음식숙박업이나 단순노무직과 같은 단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sup>. 반면 25~34세와 35~54세의 비중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순시간제 근로의 일자리 선택동기를 보면, 2014년 8월 기준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가 23.2%로 가장 높았고, ‘근로조건에 만족해서’가 19.8%로 둘째로 높았다. 시간제 전체와 비교했을 때,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한’ 이유의 선택동기는 시간제 전체에 비해 낮은 수준인 반면, ‘근로조건에 만족해서’라는 이유는 비슷한 수준에 있었다.

다음으로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저임금 일자리와 순시간제의 중위임금보다 높은 일자리 비중을 계산해 보았다(표 7 참조). 임금근로자의 저임금 비중은 약 25% 전후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시기에 따라 대략 24~27% 사이에서 변동하고 있다. 반면 시간제 근로의 저임금 수준은 2004년 44.0%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4년 62.4%까지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체 시간제 근로의 절반 이상이 저임금상태에 있는 것이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다른 근로형태와도 겹쳐 있지 않은 순시간제로 한정하고 보아도 다르

2) 순시간제는 근로형태의 특성상 일부 산업에 몰려 있는데, 2014년 8월 기준으로 주로 몰려 있는 산업을 살펴보면, 도소매업(20.7%), 숙박 및 음식점업(26.3%), 교육서비스업(14.4%), 보건 및 사회복지업(11.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시간제와 순시간제의 저임금 비중 추이(2004~2014년)

(단위 : %)

	저임금비중	시간제 저임금 비중	순시간제 저임금 비중	순시간제 중 중위임금보다 높은 비중
2004	26.3	44.0	43.8	30.9
2005	26.6	46.6	42.9	32.0
2006	25.8	43.4	41.8	27.7
2007	27.4	49.6	47.6	25.5
2008	26.0	52.7	52.7	26.0
2009	26.2	55.3	54.9	20.3
2010	26.3	56.4	56.5	17.7
2011	22.6	53.7	54.6	21.6
2012	24.8	60.2	61.2	18.8
2013	24.7	62.0	64.2	16.3
2014	24.0	62.4	61.8	16.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 연도.

지 않았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시간제 저임금 비중과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이며 2012년 이후 60%를 상회하는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반면 순시간제 가운데 순시간제의 중위임금보다 높은 수준에 있는 비중은 2004년 30.9%에서 지속적 감소를 하며, 특히 금융위기를 거친 이후 10%대 수준까지 감소해 2014년 16.2%를 기록했다. 이는 순시간제의 연령대 구성에서 고령자와 청년에서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순시간제의 사회보험 가입률과 기업복지 수혜율을 시기별로 보면, 사회보험 가입률은 20% 미만에 그치고, 기업복지 수혜율은 상여금을 제외한 대부분에서 9~13% 수준에 머물고 있음이 확인된다. 대부분의 순시간제가 비공식영역에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2004년 이후 지역가입자를 제외하고 사업장 가입자만 고려할 경우 순시간제의 사회보험가입률(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모두 2011년 10%대에 진입해 최근까지 빠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일부 공식영역으로 포괄되고 있음이 주목할 만하다.

정리하면, 순시간제 근로는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퇴장하는 연령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일부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일부는 근로조건에 만족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순시간제는 생활비 등 당장의 수입이 일자리 선택 동기로 작용했고, 60% 이상이 저임금 일자리에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순시간제 근로를 중심으로 사회보험가입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80% 이상이 비공식고용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인 순시간제는 정규직시

간제 혹은 시간선택제에 가까운 괜찮은 일자리는 일부에 불과하며 대체로 비공식고용인 낮은 임금과 근로조건이 좋지 않은 질 낮은 일자리가 대부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표 8> 순시간제의 사회보험 가입률과 근로복지 수혜율 추이(8월 기준)

(단위 :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2004	1.9	3.2	3.8	2.0	3.1	2.0	2.0
2005	2.1	2.4	2.1	2.3	3.0	3.6	2.3
2006	4.6	5.4	4.5	2.2	3.5	3.3	2.9
2007	3.3	3.9	3.3	2.0	3.9	3.0	2.6
2008	7.4	6.8	6.5	4.3	5.7	3.6	2.6
2009	8.3	8.4	8.9	5.6	11.8	7.7	5.2
2010	8.1	8.5	9.0	6.4	14.4	7.3	5.2
2011	10.1	11.9	13.0	8.6	14.5	8.6	5.1
2012	11.7	13.3	13.7	9.8	15.6	8.2	7.4
2013	13.5	18.0	17.2	12.6	22.0	11.2	9.3
2014	15.7	18.2	18.9	13.7	21.9	11.2	9.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 연도.

### Ⅲ. 비정규직 임금 변화

<표 9>와 <표 10>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수준과 시간당 임금 격차를 보여 주고 있다. 2014년 8월 비정규직 규모는 증가했지만 비중은 줄어들은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상대적인 임금수준은 평균적으로 하락한 특징이 관찰된다.

2014년 비정규직의 지난 3개월(6~8월) 동안의 월평균 임금은 145.3만 원으로 2013년에 비해 1.7% 증가하였고,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260.4만 원으로 2.3% 증가해 비정규직의 임금상승이 정규직 임금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월평균 임금으로 본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수준은 2013년 8월 56.1%에서 2014년 8월 55.8%로 그 격차가 확대되었고, 2007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63.5%)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까지 확대되었다.

세부 근로형태를 보면, 한시적 근로 중 반복갱신과 비전형 근로 중 가내근로를 제외한

〈표 9〉 근로형태별 임금수준(월평균)

(단위 : 만 원, %)

		2005	2007	2009	2011	2012	2013	2014
임금근로자		159.3 ( 3.3)	174.6 ( 5.4)	185.2 ( 0.3)	203.2 ( 4.3)	210.4 ( 3.5)	218.1 ( 3.7)	223.1 ( 2.3)
정규직		184.6 ( 4.2)	200.9 ( 5.3)	220.1 ( 3.5)	238.8 ( 4.1)	246.0 ( 3.0)	254.6 ( 3.5)	260.4 ( 2.3)
비정규직		115.6 ( 0.4)	127.6 ( 6.5)	120.2 ( -7.3)	134.8 ( 7.1)	139.3 ( 3.3)	142.8 ( 2.5)	145.3 ( 1.7)
한시적 근로	한시근로	124.0 ( 0.7)	144.0 ( 9.7)	130.1 (-10.8)	150.2 ( 7.3)	156.7 ( 4.3)	160.2 ( 2.2)	161.4 ( 0.8)
	기간제	125.8 ( 6.0)	141.9 ( 9.8)	131.1 (-12.0)	146.3 ( 7.6)	154.5 ( 5.6)	158.1 ( 2.3)	158.3 ( 0.2)
	반복갱신	169.2 (-0.7)	194.9 ( 9.9)	193.1 ( 4.2)	220.2 (-2.7)	214.7 (-2.5)	241.4 (12.4)	222.8 (-7.7)
기대불가		92.4 ( 0.4)	94.5 (-0.7)	103.9 ( -1.2)	119.6 (12.7)	129.7 ( 8.5)	123.4 (-4.9)	128.7 ( 4.3)
비전형 근로	비전형	108.1 ( 1.2)	111.2 ( 6.3)	119.1 ( -0.5)	132.1 ( 5.8)	138.2 ( 4.6)	141.2 ( 2.1)	151.5 ( 7.3)
	파견	131.6 ( 3.5)	134.1 ( 6.4)	141.4 ( -4.0)	152.4 ( 8.0)	162.0 ( 6.3)	149.9 (-7.5)	152.7 ( 1.9)
	용역	94.8 ( 2.8)	102.4 ( 9.7)	111.1 ( 2.5)	122.4 ( 4.2)	126.4 ( 3.2)	135.4 ( 7.1)	138.3 ( 2.1)
특수고용		142.2 ( 2.3)	142.2 ( 7.6)	152.9 ( -1.6)	179.2 ( 9.9)	181.3 ( 1.2)	180.1 (-0.7)	207.2 (15.0)
가내근로		56.7 ( 0.5)	56.8 (-4.7)	60.0 ( 23.4)	52.0 (19.4)	66.3 (27.6)	60.7 (-8.4)	60.3 (-0.6)
일일근로		86.0 ( 2.7)	89.2 ( 2.2)	95.3 ( -3.1)	105.5 ( 1.4)	115.2 ( 9.2)	121.1 ( 5.2)	127.4 ( 5.2)
시간제근로		52.2 (-3.1)	56.1 ( 1.9)	53.5 ( -6.7)	60.4 ( 7.0)	60.8 ( 0.5)	65.4 ( 7.7)	66.2 ( 1.2)

주 : ( )안은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근로형태에서 임금은 플러스 상승을 했다. 특히 반복갱신은 한시적 근로 중 정규직의 근로조건과 상당히 유사한 근로형태로 2013년 대비 월평균 임금이 크게 감소(-7.7%)하였고, 기대불가(4.3%)와 기간제(0.2%)는 2013년 대비 증가했다. 비정규직 가운데 비교적 월평균 임금 수준이 높은 특수고용(15.0%)의 임금상승이 두드러진 가운데 파견근로(1.9%)와 용역(2.1%), 시간제(1.2%)는 낮은 수준의 임금상승을 하였고, 일일근로(5.2%)는 임금상승률이 높았다.

월평균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을 이용해 시간당 임금으로 전환하여 상대임금격차를 분석해 본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은 2014년 8월 64.3% 수준으로 2013년 8월 대비 0.5%p 격차가 증가했다. 시간당 임금으로 본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은 2004년 73.5%에서 2005~2007년 70% 초반으로 하락한 수준을 유지하다 국제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60%대로 격차가 더욱 커졌고, 2009년 61.5%로 저점을 기록한 이후 2011년까지 상승세를 보였지만, 2012년 이후에는 등락을 반복하며 64%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시적 근로 가운데 반복갱신의 상대임금 수준은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준(85.8%)을 기록했으며, 모든 근로형태 중 하락폭(10.5%p)이 가장 컸다. 기간제의 상대임금 수준도

1.4%p 하락해 67.8% 수준에 그쳤으며, 여전히 200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대불가의 상대임금 수준은 2013년 대비 상승(0.7%p)했지만 그 수준이 매우 작았으며, 정규직 임금의 절반수준(5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8월 기준 비전형근로 중 특수고용(7.9%p)과 일일근로(2.0%p)를 제외한 모든 근로형태의 정규직 대비 상대임금격차는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견근로의 경우 2014년 정규직 대비 상대임금격차는 2.0%p 감소했으며,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에 비해 10.0%p나 낮은 수준으로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가운데 유일하게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의 2014년 8월 기준 정규직 대비 상대임금은 54.0%로 추세적으로 2011년과 2013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정규직 대비 임금수준이 하락하는 것이 관찰된다.

근로형태별로 본 정규직 대비 상대임금은 특수고용의 상대임금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상대적으로 일자리 질이 좋다고 보기 어려운 기대불가와 용역근로, 일일근로를 제외한 근로형태 모두의 상대임금격차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14년 8월 기준 비정규직의 임금상승률이 정규직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면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격차는 더욱 커져 2007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시간제 근로의 꾸준한 증가가 이어지고

〈표 10〉 근로형태별 임금수준(시간당)

(단위 :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정규직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73.5	70.5	71.0	70.9	68.0	61.5	62.5	65.3	64.3	64.8	64.3
한시적 근로	한시근로	75.9	72.4	74.3	76.1	72.7	64.1	66.2	69.3	69.0	69.1	67.7
	기간제	75.6	74.5	74.6	76.3	75.1	65.5	65.8	69.0	69.4	69.2	67.8
	반복갱신	96.3	89.1	94.0	98.1	88.4	87.2	100.8	93.7	86.5	96.0	85.8
	기대불가	54.7	54.1	51.3	48.0	51.6	48.7	46.4	52.4	54.2	50.9	51.6
비전형 근로	비전형	66.0	63.2	60.1	60.1	59.4	57.0	57.4	58.5	58.7	58.3	60.8
	파견	78.0	76.1	66.3	70.8	71.3	69.7	64.5	66.5	73.4	62.8	60.8
	용역	50.0	48.4	46.1	48.4	49.1	47.9	50.3	49.8	48.9	52.0	51.8
	특수고용	86.1	83.2	81.4	79.9	79.7	75.4	77.1	82.4	78.4	76.1	84.0
	가내근로	43.1	47.8	42.9	34.9	36.4	37.1	31.3	34.9	41.6	33.3	27.8
일일근로		55.2	53.7	51.5	52.0	51.2	47.6	49.0	47.4	50.1	51.5	53.5
시간제근로		80.2	76.7	73.1	66.6	64.7	56.2	55.5	59.3	53.3	55.5	54.0

주 :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했을 경우 상대수준.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다른 근로형태는 감소하면서 비정규직 구성이 변하고 있고, 동시에 비정규직 내 중핵연령은 감소하고 청년과 고령층 중심으로 인적특성이 변화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상대임금격차가 국제금융위기 이전보다 커져서 여전히 이전 수준으로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Juhn, Murphy, & Pierce<sup>3)</sup>의 분석방법을 활용해 임금격차 분해를 해 보았다. 이 분해 방법에 따르면 시간에 따른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변화는 설명변수에 의해 관찰된 요소의 변화와 관찰되지 않은 요인에 근거한 변화로 구분될 수 있다. 관찰된 요소의 변화는 다시 분포 자체의 변화와 이 요소들의 가격변화로 분해될 수 있으며, 미관찰된 요인의 변화도 미관찰 요인의 분포변화와 미관찰된 요인의 가격변화로 각각 분해될 수 있다.

관찰된 요소의 분포변화는 이를테면 연령이나 성과 같은 요소의 구성변화의 효과를 나타내는데, 노동시장에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남성 30~40대에서 비정규직이 줄게 된다면,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이 줄어드는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증가하게 된다.

관찰된 요소의 가격변화는 이를테면 특정 학력이나 연령에게만 비정규직의 임금을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된다. 가격변화가 모두 차별의 변화로 환원되지는 않지만, 차별 요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차별의 강화로 인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벌어졌다면 가격구조 변화의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회귀식을 추정하고 난 잔차에는 회귀식에 들어간 설명변수들(관찰된 요소들)로 설명되고 남은 임금변동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 설명되고 남은 임금에서의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를 잔여 임금격차라 하는데, 이 잔여임금격차도 분포변화와 가격변화를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위 “스펙”은 데이터 상에서 세밀하게 구분할 수 없어 미관찰 요소가 된다. 만약 스펙 좋은 사람은 과거보다 지금 더 정규직 일자리를 쉽게 가질 수 있게 노동시장 상황이 변화했다고 가정했을 때, 정규직에는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다수를 점하게 될 것이고, 스펙 나쁜 사람들은 과거보다 지금 더 정규직 일자리를 가지기 어렵게 된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스펙에 대한 보상이 동일하다 가정하더라도 비정규직의 평균 잔여임금 수준이 더 떨어질 수 있게 되고, 이러한 미관찰 요소인 스펙의 분포변화는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늘리는 방향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찰되지 않은 요소의 가격변화는 과거보다 기업에서 스펙 좋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게 된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비정규직보다 정규직 안에 스펙 좋은 사람이 더 많을 것이고, 대개 스펙 좋은 사람들이 임금도 높므로, 정규직 고임금층의 임금은 정규직 저임금층이나 비정규직보다 더 많이 증가할 것이다. 정규직 저임금층 대

3) Blau, F. and L. Kahn(1996), “Wage Structure and Gender Earnings Differential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Economica* 63(250), S29-62에서 이용된 방법을 따랐다.

비 비정규직 임금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정규직 고임금층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것이 미관찰 요소인 스펙의 가격변화에 따른 임금격차 증가가 된다. 미관찰 요인과 관련된 가격변화 효과도 차별적인 보상의 측면을 포함할 수 있겠다.

비교 대상시기는 내수침체가 있기 직전 시기인 2007년 8월과 2014년 8월로 하였다. 경기침체가 오면 우선적으로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 비정규직이므로, 이미 상대임금이 떨어지는 등의 변화가 이 시기에 나타났다. 이를 감안하여 내수침체가 시작되기 전인 2007년 8월을 비교의 시작 시점으로 삼았다.

2007년 8월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보다 2014년 8월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는 8.7%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난 임금격차의 변화를 100이라 볼 때 통제변수로 무엇을 이용하는가에 관계없이 구성변화효과의 역할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변화는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과 2014년 간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의 증가가 차별적 요인의 증가로 인해 발생했다기보다는 비정규직 내부 인적특성의 구성변화와 연관이 더 크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특히 연령과 성별, 학력의 분포변화만으로도 임금격차의 전부가 설명되는 것으로 보아 앞서 보았던 노동시장의 인적특성 변화가 비정규직 임금격차에 주된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표 11〉 금융위기 이전(2007년)과 2014년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변화 분해(시간당 임금)

		통제변수의 구성변화로 설명되는 부분	통제변수의 가격변화로 설명되는 부분	미관측 구성변화로 설명되는 부분	미관측 가격변화로 설명되는 부분	총구성변화 효과	총가격변화 효과
'07.8 { '14.8	연령	0.082	-0.015	0.056	-0.036	0.138 (158.4)	-0.051 (-58.4)
	연령 · 성	0.092	-0.022	0.046	-0.030	0.138 (158.8)	-0.051 (-58.8)
	연령 · 성 · 학력	0.085	-0.037	0.054	-0.015	0.139 (159.4)	-0.052 (-59.4)
	연령 · 성 · 학력 · 근속	0.112	-0.067	0.048	-0.005	0.160 (183.3)	-0.073 (-83.3)
	연령 · 성 · 학력 · 근속 · 규모	0.112	-0.060	0.041	-0.005	0.152 (174.9)	-0.065 (-74.9)
	(가)직 · 산업	0.111	-0.048	0.027	-0.003	0.138 (158.6)	-0.051 (-58.6)

주: 각 연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계산. 실질시간당 임금에 로그를 취해 종속변수로 이용했으며, 연령은 연령 및 연령 제곱, 근속은 근속개월 그대로, 여성 비중은 여성더미, 학력은 중졸 이하를 기준으로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더미, 규모는 300인 이상을 기준으로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을 더미로, 산업은 산업대분류(제조업 기준), 직종은 직종대분류(전문직종사자)로 하여 회귀식을 추정하였으며, 회귀식 추정 결과 보고는 원고 분량상 생략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 연도.

## IV. 결론

지금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자료를 이용해 비정규직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변화를 분석했다. 2014년 8월 기준 비정규직은 규모는 증가했지만, 임금근로자 증가폭이 워낙 큰 영향으로 비중은 감소했으며 2004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비정규직 내부 구성변화에서는 무엇보다도 시간제 근로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비정규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섰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비정규직의 다수를 차지하는 근로형태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제 근로 가운데 중복을 제거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순시간제 근로는 시간제 근로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대체로 일부 연령과 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저임금, 낮은 사회복지수혜율을 적용받는 비공식고용에 다수 몰려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핵심연령층이 비정규직에서 이탈되고 여성과 고령층 중심으로 비정규직이 잔여적 성격을 이어가는 양상은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경향이 벌어지고 있으며, 2013년 8월에 비해서는 청년층에서 비정규직이 소폭 증가한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구성변화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보다 정규직·비정규직 상대임금격차가 축소되지 못하고 증가한 결과를 가져왔다. 정규직·비정규직 대비 상대임금격차가 2007년 이전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는 비정규직 내부 인적구성의 변화와 연관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중핵연령층에서 비정규직이 감소하고 여성과 중고령자 중심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구성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차별의 증가에 의한 임금격차라기보다는 취약한 특성을 가진 집단이 비정규직으로 남게 되는 영향이 포괄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이다. **KLI**

### <참고문헌>

Blau, F. and L. Kahn(1996), “Wage Structure and Gender Earnings Differential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Economica* 63(250), S29~62.